'눈덩이 부채' 한전,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올리나

10분기 연속 동결…206조원 부채에 내년 1분기 인상 관심 산업용만 올려 비싼 전기료에 기업들 '탈한전' 현상도 현실화

한국전력공사(한전)이 206조원에 달하는 부채 와 막대한 누적적자 해소 등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 에 집중하면서 내년 1분기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10분기 연속 동결된 반면 산업용 요금만 잇따라 인상되면서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및 한전의 재무 회복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싼 산업용 전기요금에 전력 직접구매 제도 등을 통한 기업들의 '탈한전' 현상이 가속화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한전과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 이사 회는 최근 연이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 한 기업들의 대규모 이탈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

앞서 한전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재무구조개 선을 위해서는 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 지만, 국민의 요금 인상 부담을 우려한 정부는 주택 용·일반용 전기요금 인상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만 대폭 인상한 상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0월 1kWh(킬로와트시) 당 16.1원(9.7%) 인상됐다. 그 결과 대기업 등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용(갑) 요금이 1kWh 당 173.3원, 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산업용(을) 요금은 182.7원을 기록했다.

반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2023년 3분기~ 2025년 4분기까지 10분기 연속 동결됐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전력직접구매제 도입에 나서는 기업도 늘고 있다. 첫 주자로 'SK어드밴스드'가 지난해 말 직접구매를 신청하고, 지난 4월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력 직접거래자 등록을 신청하는 등 기업의 '탈한전' 현상이 현실화되

현재 한전은 총 부채 206조원, 누적적자 29조원 등 재무위기와 더불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분산에너지 확산 등을 위한 대규모 배전망 투자, 누진 제 완화 등으로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나마 올 상반기까지 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2021~2023년 누적 적자를 17조원 가까이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막대한 부채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이자 부담이 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기요금체납건수와체납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송재봉 위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2021년 89만 8000호, 2023년 93만 9000호, 2025년 8월 기준 98만 3000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체납액도 2021년 1522억원에서 2025년 8월 2824억원으로 5년새 85.5%나 늘었다.

이 중 2회 이상 체납 대상자의 체납금은 올 8월 기준 2479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의 88% 수준에 이 로다

한전 측은 더딘 재무 건전성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주택용·일반용 전 기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요금은 지난해 인상을 통해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주택용 요금은 여전히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이기때문이다. /장윤영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 청렴 감사관 3명 위촉·정기회의

청렴마일리지 기준 제시·전 직원 교육 캠페인 추진 등 논의



한전KDN은 "최근 '2025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한전KDN 청렴시민감사관은 주요 사업 수행 및 청렴·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감 시·조사·평가하고,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독립적 지위를 부여받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22년부터

이날 정기회의에는 정연복 한전KDN 준법경영 실장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외부 전문가, 한전KDN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청 렴시민감사관 위촉식과 보고 안건 2건, 제도개선 에 대한 권고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행되고 있으며, 2년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신규 청렴시민감사관으로는 박윤해 변호사, 정 원진 변호사, 김성균 참 회계법인 대표 등이 위촉 됐다

정기회의의 안건인 윤리경영 추진 현황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청렴시민감 사관들은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명확한 기준 제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 제도운영을 위한 세칙 개정, 종합청렴도 관련 내부 체감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전 직원 대상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추진 등을 권고했다. /장윤영기자 zzang@

BB THE HONEST FARMER NELLIPLES D1 C9 THE VEANS DESCRIPTION OF THE VEAN

aT, LA·휴스턴서 '미주 K-푸드 페어'

98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식품부와 함께 지난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번 달엔 휴스턴에서 '2025 미주 K-푸드 페어'를 개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이번 페어는 서부 중심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B2B(기업 간) 수출상담회와 남부 최대도시 휴스 턴에서 B2C(기업 소비자 간) 소비자체험행사로 나눠 추진됐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K-푸드

수출 기반 및 인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24~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는 국내 43개 식품기업과 미주 바이어 77개 사가 참여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415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전통주와 가정간편식, 장류·소스류 등을 중심으로 98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11건이 체결됐다. 이어 지난 11~12일 개최된 소비자체험행사는 '휴스턴 K-페스티벌'과 연계해 K-컬처를 아우르는 대규모 축제형 행사로 개최됐다. /장윤영기자 zzang@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인력 500명 이상 아직도 수도권 잔류

153명은 지방시대위 미승인 인원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1차 이전 당시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수도권에 남아 있는 인력이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수도권 잔류 인원'도 150여명에 이르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 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석한 결과, 1차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잔류 인 원은 1974명이었다. 이 중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1 차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잔류 인원은 547명 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했다.

또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잔류 인원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원도 153명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56명으로 수도권 잔류 미승인 인원이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42명),한전KDN(35명),한국콘텐츠진흥원(20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미승인 인원이 없었다.

지금까지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최근 국토교통부와 감사원 등이 해당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혁신도시가 지방 분산 발전 등을 위해 조성됐다는 본 취지에 발맞춰 임직원들의 이전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별도의 승인 절차조차 없이 일부 이전 공공기관들의 인력이 수도권에 배치된 것이다.

특히 aT의 경우 전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수도권 잔류 인원 전체가 승인을 받지 않은 8개 이전 공공기관 중하나로 꼽혔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잔류 인원을 위한 업무 공간 유지비로는 건물 가액 및 연간 임차료를 모두 포함해 연간 270억 9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 건물 가액이 약 190억원, 서울 소재 건물 임차료는 연간 58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해당 건물들의 연간 관리비는 22억 20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전과 aT의 건물 가액이 각각 7억 8000만원, 12억원 등을 기록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심 지역 농지 매물 알림 서비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관심 지역 농지 매물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알림서비스는 농업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지가 매물 시장에 나와도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농업인의 민원을 반영해 제도화한 것이다.

농업인이 농지은행 통합포털에 회원 가입하고 읍·면·동 단위로 최대 3개의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 농지 매물이 등록된 다음 날 오전 10 시에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농업인이 편하게 농지를 찾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객과 현장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